

## 프랑스 대선 분석 및 향후 전망

오태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차 례

1.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결과
2. 마크롱 당선자의 주요 정책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74.62% 투표율)에서 앙 마르슈의 엠마누엘 마크롱 후보(득표율 66.06%)가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30.94%)을 누르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
  - 1968년 이후 처음으로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vs 사회당' 양자대결이 깨진 첫 번째 사례로,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진 프랑스 국민들이 비주류 정치신인이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함.
- ▶ 결선투표는 '親EU vs 反EU', '자유 vs 보호', '관대 vs 엄격'이라는 정책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후보간의 대결로 이루어졌으며,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은 프랑스 국내 정치·경제는 물론 EU 통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U 정책] 대선출마 후보자들 중 가장 親EU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마크롱은 EU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EU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선거기간 중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비판적인 마크롱의 당선으로 브렉시트 협상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경제·기업 정책] 現 올랑드 정부 초기, 경제장관을 역임한 마크롱은 親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장려를 통해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임.
  - [이민 정책] 마크롱은 EU 국경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EU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이민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취임 6개월 이내에 EU 난민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통상 정책]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권역의 확대를 중시하는 만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찬성하는 입장임.
- ▶ 6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마크롱이 이끄는 신생 정치단체인 앙 마르슈가 249~286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OpinionWay, 4월 23일~5월 2일)되는 가운데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향후 프랑스 정치·경제의 중요 변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약속한 정치행보 및 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과반의석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반의석에 실패할 경우 동거정부 구성과 같은 추가적인 정치 일정이 정책집행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총리와와의 불협화음은 프랑스 정치·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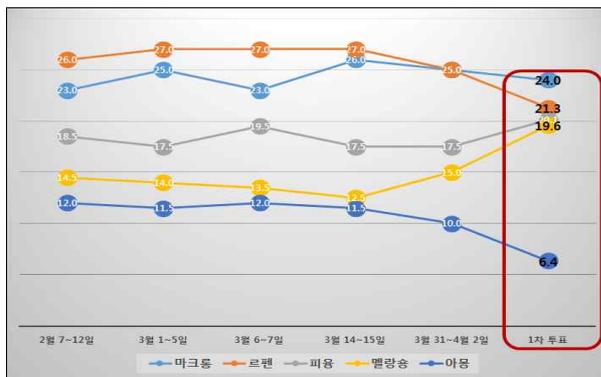
# 1.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결과

■ 5월 7일 열린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앙 마르슈의 엠마누엘 마크롱이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을 누르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sup>1)</sup>

-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각각 24.01%와 21.30%로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며,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66.06%를 득표하며 33.94%를 득표한 르펜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이번 대선의 결선투표율은 74.62%로 1차 투표율(77.77%)을 소폭 하회하였는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한 마크롱의 당선 가능성과 두 후보자간 대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으로 투표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선거이전부터 후보자간 反르펜연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며, 1차 투표 이후 공화당의 피용 후보와 사회당의 아몽 후보가 공개적으로 마크롱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이 전망되어짐.
- 1차 선거일 3일 전인 4월 20일에 프랑스 중심부인 파리 상젤리제에서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큰 이변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 여론조사에서 26%에 이르던 부동층이 IS에 의한 테러로 인해 反이민을 주장해온 르펜이나 피용 후보에 대한 지지로 돌아설 경우, 마크롱 후보의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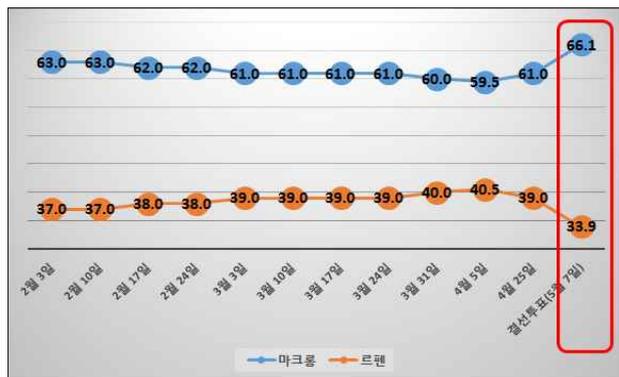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후보별 득표율

(단위: %)



자료: Ipsos; Ministère de L'Intérieur.

그림 2. 결선투표 여론조사 지지율과 최종 득표율



자료: Ipsos; Ministère de L'Intérieur.

■ 브렉시트 이후 치러진 이번 프랑스 대선은 모두 11명이 출마했으며, ‘급진성향 vs 중도성향’, ‘親EU vs 反EU’ 간 경쟁 속에서 마크롱과 르펜 후보 간의 양자대결 양상을 보였음.<sup>2)</sup>

1) 현 올랑드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과 치안문제로 인해 4%의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12월 1일 사회당이 극우와 보수우파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회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2) 5명의 유력 후보(앙 마르슈의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공화당의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 좌파당의 장 뤽 멜랑송(Jean-Luc Mélançon),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 이외에 노동자투쟁당의 나탈리 아르토(Natalie Arthaud), 반자본주의신당의 필리프 푸투(Philippe Poutou), 연대와진보당의 자크 슈미나드(Jacques Cheminade), 대중공화연맹당의 프랑수아 아슬리노(Francois Asselineau), 공화국세우기당의 니콜라 뒤퐁에냥(Nicolas Dupont Aignan), 저항당의 장 라살(Jean Lassalle) 등이 있음.

- 중도파 성향인 마크롱 후보는 올랑드 정부 시절에 경제장관을 역임했으며, 대선 직전 사회당을 탈당하고 신생 정당인 ‘앙 마르슈(전진!)(En Marche!)’를 결성하여 이번 대선에 출마함.
- o 투자은행 관료 출신이라는 경력과 함께 親기업주의, 親자유시장경제, 親EU, 재정지출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고학력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
- 극우파인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르펜 후보는 이번 선거 기간 중 反EU 정서의 정책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대선 후보자들 중에서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음.
- o 프랑스의 EU 탈퇴(프렉시트) 및 프랑화로의 복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을 주장
- 중도우파인 국민운동연합(UMP: L'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피용 후보는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총리를 역임했으며, 선거 초반 유력 후보로 부상했으나, 여러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함.
- o 반난민, 反이슬람, 親러시아 등의 정책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
- 현 집권당인 사회당(PS: Parti Socialiste)의 브누아 아몽 후보는 교육부장관 출신으로 마누엘 발스 전 총리를 누르고 사회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만큼이나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음.
- o 진보적 좌파주의 성향인 아몽 후보는 親산업, 기본소득제 도입 등의 정책적 공약을 제시함.
- 프랑스 강경좌파운동단체(FI: La France Insoumise/Le Parti de Gauche)의 멜랑송 후보는 프랑스 상황을 혁명 직전의 상황으로 판단하며 유럽 및 프랑스 차원의 시민혁명을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당초 기대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 o 親서민정책, 자유무역반대, EU 조약 재협상, 르펜의 국경통제 및 反이민정책 반대 등의 급진적인 공약을 제시함.

그림 3. 마크롱 및 주요 후보별 정치 성향



자료: Samsung Securities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한편 이번 프랑스 대선은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투영되면서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1차 투표 결과, 1968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vs 사회당’ 후보자간 결선투표 대결이 깨진 첫 번째 선거로 기록됨.
- 마크롱과 르펜 모두 기성정치의 주류 인사가 아닌 아웃사이드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2017년 프랑스 대선은 프랑스 정치역사에서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2. 마크롱 당선자의 주요 정책3)

■ [인물 총평] 정치경험이 적은 마크롱이 첫 번째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과 유력 후보였던 피용의 개인적인 스캔들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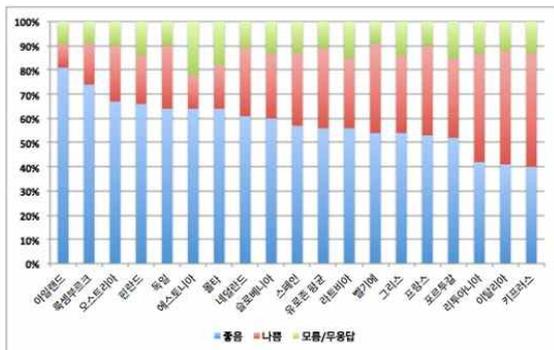
- 마크롱은 국립행정학교(ENA) 출신으로 회계감사원과 로스차일드계 은행에서 근무했으며, 올랑드 정부 초기 경제장관을 역임했으며, 의회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프랑스 우파가 아닌 사회당 정부의 각료로 정계에 진출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경제장관 시절 야당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킨 ‘마크롱 법’은 그의 정치적인 능력을 반증하고 있음(글상자 1 참고).

■ [EU 정책] 마크롱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EU적 가치와 통합을 가장 중시한 후보임.

- 마크롱은 유럽재정위기 및 브렉시트와 같은 EU 통합의 불안요인을 EU 체제 내에서 통합의 심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새롭게 유로존 경제 및 재무부 창설을 주장함.
- o 유로존 회원국의 의회 감시 하에 예산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로존 경제 및 재무부 신설을 주장함.
- o EU 단일시장에 대한 확산하에서 디지털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억 유로 규모의 ‘European Venture Capital Financing Fund’를 조성함.
- ‘Buy European Act’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 공정의 절반 이상을 유럽에 두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함.
- 새롭게 ‘유럽주권(European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위해 ‘국제문제는 프랑스, 경제문제는 독일’이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독-불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그림 4]에서처럼, 유로화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긍정적인 정서가 유로존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EU 및 유로화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프랑스가 EU 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임.

그림 4. 유로화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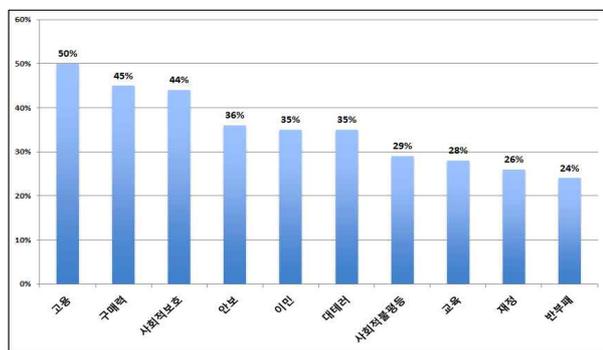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pinion Way(2017. 4).

그림 5. 프랑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

(단위: %, 복수응답)



자료: Eurobarometer(20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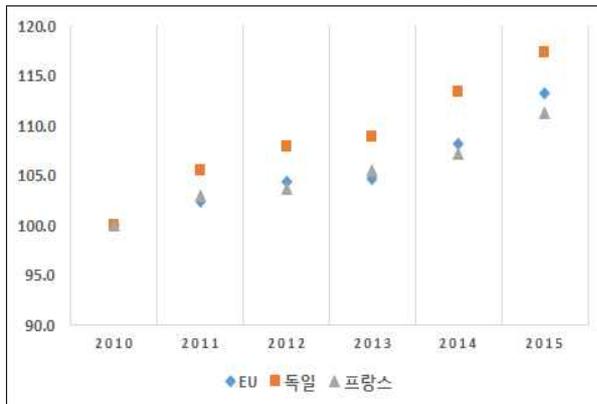
3) 마크롱의 정책공약집 “En Marche! Emmanuel Macron President Programme”을 참고함.

4) 피용 후보 부인의 세비횡령 의혹과 불법선거자금지원 등이 공개되면서 피용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함.

- [경제·기업 정책] 유럽 재정위기와 정책 실기(失機)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마크롱은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 민간부문 투자확대, 親기업정책을 통해 저성장 탈출과 경쟁력 회복을 꾀하고 있음.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하락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공부문 적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500억 유로의 공공지출 삭감이 경제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림 7]에서처럼 프랑스의 정부지출 비중(GDP 대비 %)은 EU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큰 공공부문 규모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개혁을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지적되던 문제임.
  - 한편 2022년까지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직업훈련과 이직자 지원에 150억 유로,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생산에서 대체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150억 유로, 농촌지원을 위해 50억 유로, 노후한 기차선로의 현대화를 위해 50억 유로, 헬스케어 부문에 50억 유로, 공공행정서비스의 근대화·자동화를 위해 50억 유로를 각각 투자한다고 밝힘.
  - 2010년 기준으로 한 독일이나 EU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프랑스의 구매력을 개선하기 위해 마크롱은 최저소득인상 대신 근로자들의 사회보장기여금 축소를 통한 실질소득 증가를 유도함(그림 6 참고).
  - 부유세(ISF: 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를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부동산세로 대체함.

그림 6. EU 주요국 1인당 PP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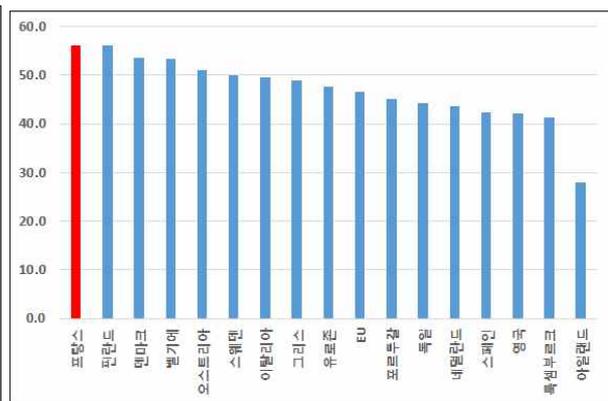
(단위: 2010=100)



자료: Eurostat.

그림 7. 유럽 주요국 정부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 마크롱은 경제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親기업 정책의 원칙을 이어받아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 정책을 약속함.
  -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 33.3%에서 EU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여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킴.
  -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 및 혁신비즈니스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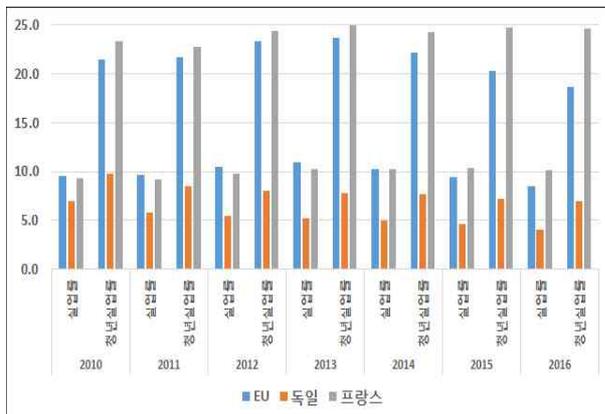
글상자 1. 마크롱 법안의 주요 내용<sup>5)</sup>

- 2014년 8월 올랑드 정부 초기 경제·산업 및 디지털부 장관으로 임명된 마크롱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4년 말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을 의회에 제출, 이후 3번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동 법안이 최종 채택
- **일요일 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 개선:** 주요 관광도시에 위치한 상점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일요일 영업 및 심야영업이 가능하게 됨. 이전에는 일반 상점의 경우 1년에 5번만 일요일에 영업을 가능했음.
- **프랑스 장기버스노선 자율화:** 기차보다 저렴한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이 동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집단해고의 유연성 제고:** 고용주가 해고기준의 적용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특정 직업군의 진입장벽 완화:** 독과점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직군(법원 집행관, 공증인, 경매이 등)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고함.

- [노동시장정책]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높은 실업률,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sup>6)</sup> 마크롱은 실업률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함.
  - 親기업적·親고용주적 정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며, 근무시간 완화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임.
  - 주당 35시간 근무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의 실업률을 7%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고급인력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1백만 명의 저숙련 장기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림.

그림 8. 유럽 주요국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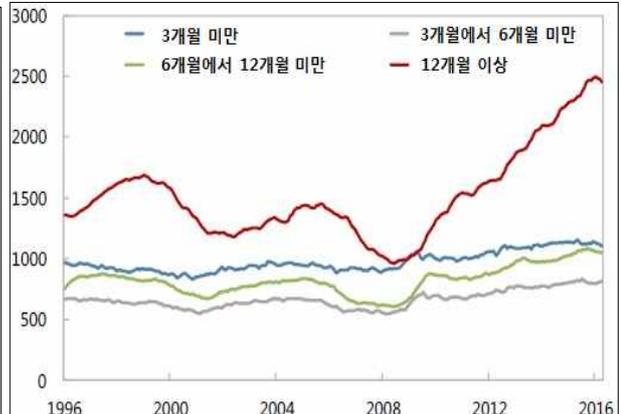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그림 9. 프랑스의 기간별 실업자 비중

(단위: 천 명)



자료: IMF(2016).

5) Loi n° 2015-990 du 6 août 2015 pour la croissance, l'activité et l'égalité des chances économiques.

6) IMF(2016), Article IV on France.

## 글상자 2. 프랑스 노동법(EI Khomri)의 주요 내용<sup>7)</sup>

- 2016년 올랑드 정부는 「근로, 사회적대화의 근대화 및 직업경력 보호법」을 제정,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 고용주 부담 완화: 유동자산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등 경영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
- 노동시간 연장: 노사합의에 따라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근무시간도 감독관이 승인할 경우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 가능
- 근로자의 연결차단권(Le droit a la deconnecxion): 업무 외 시간에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자유 인정
- 기업협약 우선: 산업별노조협약(accords de branche)보다 사업장에서 맺은 협약이 우선

■ [이민·난민 정책] 난민수용문제가 EU 및 주요국에서 주요 핵심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찬성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새로운 난민문제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 엄격한 이민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르펜이 주장하는 프랑스 국경통제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이민문제에 있어서 EU와의 협력을 강조함.
  - \* 르펜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민자의 무조건적인 추방, 합법이민자수의 연간 10,000명으로 제한, 親이민적 정책들의 점진적인 철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음.
- 마크롱은 EU 속에서의 번영을 강조하는 만큼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EU 난민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함.

■ [통상 정책] 마크롱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권역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함.

- 마크롱은 트럼프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나타내며,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임.
- 마크롱은 EU-캐나다 포괄적자유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물론 EU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도 찬성함.
- 단 무역협정을 체결 할 때, 안전, 환경, 사회보호 등 프랑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기준의 하향조정에는 반대함.
  - \* 르펜은 FTA가 프랑스 기업 및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각종 무역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자국기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기타 정책] 공공부문 축소, 연금제도 유지, 세비횡령방지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7)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 [의원 수 축소] 마크롱은 상·하원 의석을 현재의 2/3로 축소할 것을 주장함.
  - \* 르펜은 상원(348석 → 200석), 하원(577석 → 300석) 각각 다른 규모로 의원수를 줄이겠다고 언급함.
- [공무원 조직 축소] 마크롱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2만 명 축소할 계획인바,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추진할 계획임.
- [연금제도]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현 정년(62세)과 연금제도를 유지하되, 복잡한 프랑스의 연금액 산정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함.
- [세비횡령방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가족 채용을 금지함.

###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기성정치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불만이 정치신인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마크롱이 프랑스 대내외에서의 성공적인 리더십과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함.

- 대외적으로는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EU 통합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에서 마크롱의 프랑스 당선은 그동안 EU 역내에서 힘을 얻고 있던 포퓰리즘과 자국 중심주의적 급진주의에 제동을 거는 계기를 마련함.
-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후 최저 투표율,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지지 후보의 분명한 차이로 인해 마크롱이 산적해 있는 정치·경제적인 국내 문제를 해소하고 분열된 국민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은 親EU 정책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EU 역내외의 불안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으로 브렉시트 협상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 마크롱은 EU 내 문제를 EU 체제안에서 통합의 심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변화만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마크롱은 영국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만 취함)전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와 영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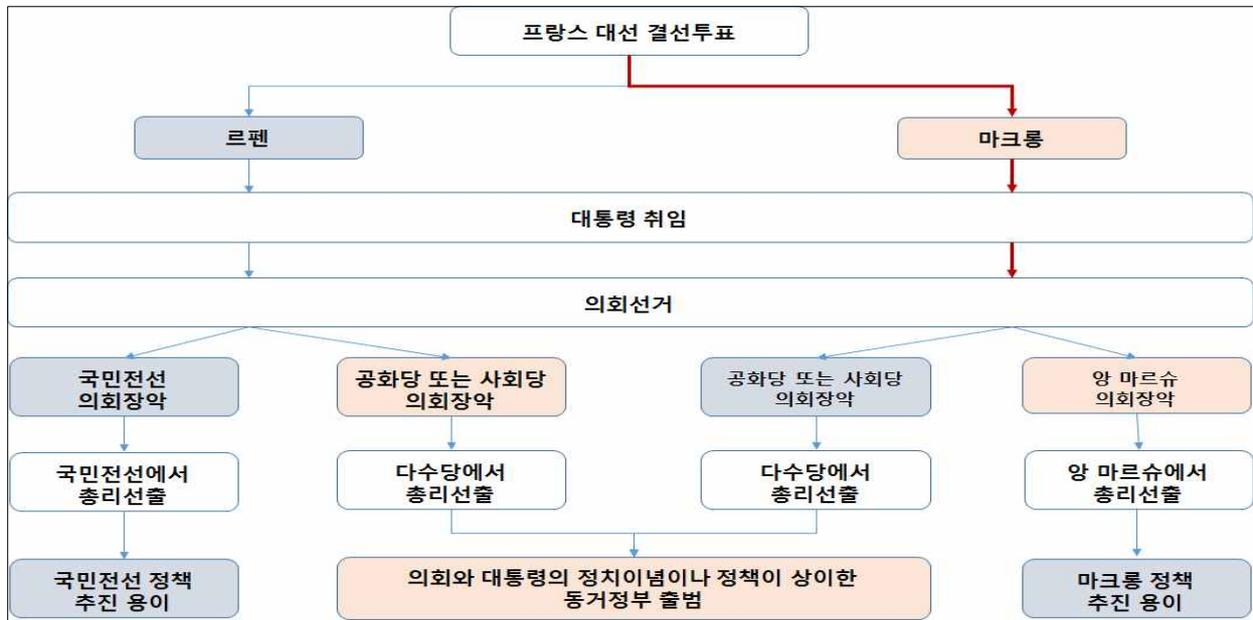
■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1차 11일, 결선 18일)에서 마크롱의 '앙 마르슈'가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집권 초기 성공적인 정책이행의 변수로 작용할 것임(그림 10 참고).

- 마크롱의 앙 마르슈는 2016년 4월 6일에 발족된 신생 정치단체로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의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월로 예정된 의회선거 결과는 프랑스 정치에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별첨 1 참고).

- 6월 총선에서 마크롱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며,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집권 초기 성공적인 정책이행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판단됨.
- 여론조사 기관 OpinionWay에 따르면 앙 마르슈가 총선에서 249석~286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됨.
- 마크롱이 의회의 지지까지 얻을 경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들의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이원집정부제하에서 마크롱의 앙 마르슈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어느 정당이 동거정부의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 마크롱이 국정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1981년 이후 프랑스에서 동거정부는 총 세 번이 있었으며,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출신의 총리와 정책집행에 있어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마크롱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이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10. 프랑스 대선 이후 정치 전망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프랑스 동거정부의 역사



주: \* 1차 동거정부, \*\* 2차 동거정부, \*\*\* 3차 동거정부.

자료: Societe Generale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별첨 1. 現 프랑스 상원(348석)·하원(577석) 정당별 의석 수

		하원			상원	
		의석수	의석비중(%)	1차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중(%)
극좌	좌파전선+급진좌파	10	1.7	7.9	20	5.7
생태주의연합	유럽녹색당+생태당	17	3.0	6.4	10	2.9
사회당	사회당+다양한좌익당	302	50.6	32.8	109	31.3
중도좌파	좌익급진당	12	2.1	1.7	17	4.9
중도우파	신우파+급진+중도연합	20	3.5	4.0	42	12.1
공화	공화당+다양한우익당	209	36.2	30.6	143	41.1
기타		5	0.9	3.0	5	1.4
국민전선	국민전선	2	0.4	13.6	2	0.6
총합		577			348	
Rulling majority		314	54.4	34.4	126	36.2

자료: Ministry of Interior, France. KIEP